

IV. 國內 企業의 Y2k 問題 對應 方案

- 2000년까지 1년 남직한 현재, 전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연도 표기 오류, 즉 'Y2k 문제'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
- Y2k 문제는 업무의 혼란, 막대한 해결 비용 부담, 미해결시 외부로부터의 제재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
- 국내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적극 실행해야 함
 - 전산 부문보다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기계 설비·기기 등 비전산 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함
 - 자체적인 해결 노력과 아울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 툴(tool) 사용이 필요함
 -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품 공급업체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
 -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 활동도 적극 수행해야 함
 - 2000년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함

1. Y2k 問題 概要

○ 背景 및 特徵

컴퓨터에서 발생하는 'Y2k 문제'는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재앙을 가져옴

- 배경
 - 2000년이 목전에 닥치면서 '컴퓨터 2000년 표기 문제', 이른바 'Y2k 문제'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
 - 컴퓨터는 우리 실생활에 주요 필수 기기로 자리잡고 있어,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재앙이 발생함
 - 현재 세계 각국과 국제 기구들이 Y2k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- Y2k 문제의 정의 및 특징
 - Y2k 문제는 초창기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네 자리수의 연도를 두 자리수로 표기함으로써 비롯되었음

‘Y2k 문제’는 컴퓨터가 2000년 1월 1일이 되면 2000년을 ‘00’년으로 인식하여 2000년과 1900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가리킴

-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컴퓨터는 2000년을 ‘00’년으로 인식하여 2000년과 1900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
-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자동화 설비, 기계 장치, 수송 기기 등에서도 발생한다는 데에 Y2k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
- Y2k 문제로 인한 영향
 - **(업무의 혼란)**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보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,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혼란이 발생됨
 - 특히,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, 날짜 관련 데이터 처리 작업이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 업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함

Y2k 문제는 업무의 혼란, 막대한 해결 비용 부담, 미해결시 제재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

- **(막대한 해결 비용)** 미국 가트너 그룹은 Y2k 문제 해결에 전 세계적으로 약 3,000억~6,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
- 우리 나라는 97년에 정보통신부가 8,000억원 정도로 예상하였지만, 98년 8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조사에서는 5조 2,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
- **(미해결 기업에 대한 제재)** 미국 정부는 Y2k 미해결 기업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, 신용평가회사들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준에 Y2k 문제 해결 정도를 삼입해 놓고 있음
- 우리 정부도 99년부터 미해결 기업에게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으며 제품 구매시 Y2k 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하기로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

○ 國內 部門別 動向

- 공공 부문
 - 97년 9월, 정부는 공공 부문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

국내에서도 공공 부문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. 그리고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·시행중에 있음

해 부처별로 ‘2000년 문제 대책반’을 구성하였음
 · 98년 초에는 국무조정실에 ‘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 협의회’를 설치하였음
 · 11월부터는 Y2k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시행하고 있음
 · 정부는 민간 부문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(clearing house) 설치, 인증 제도의 도입, 전문 인력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

- 민간 부문

· 대기업은 계열사인 시스템 통합 업체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, 이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기업도 다수 있음
 ·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, 현재 90% 이상의 금융기관이 문제 해결을 완료하였음
 · 그러나, 중소기업 및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2000년까지 완벽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많음

2. Y2k 問題 對應 方案¹⁾

○ 國內 企業의 對應 方案

- 비전산 부문의 대응책 마련 요망

· Y2k 문제는 전산 부문과 비전산 부문에서 발생됨
 · 전산 부문이란 메인 프레임, 서버, PC, 운영 체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관련 부문을 의미함

1) 이하에서 인용한 설문 조사 내용은 본 연구원이 98년 10월 22~27일 동안 FAX 설문 조사한 결과임.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hri.co.kr>)의 발간물 메뉴에 있는 기획 조사를 참조

특히 제조업체
인 경우, 전산
부문보다 대응
준비가 뒤쳐진
비전산 부문에
대한 대응책을
조속히 마련해
야 함

- 비전산 부문이란 전산 부문 이외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기계, 장비, 설비 부문을 의미하는 것임
- 비전산 부문은 자체 해결보다는 설비나 장비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
-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경우, 비전산 부문의 문제가 전산 부문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19%에 지나지 않으며, 그에 따라 아직까지 대응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도 45%에 이르고 있음
- 그러나 제조업체의 경우 비전산 부문의 Y2k 문제로 설비 가동 중단, 품질 불량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
- 따라서 부품을 비롯하여 기기·설비들의 Y2k 문제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체 해결 방안 및 아웃소싱 방안 등 다방면의 대응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

앞으로 1년 밖
에 남아있지 않
기 때문에 외부
전문업체를 활
용하는 체계적
인 접근이 필요
함

-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
 - 현재,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들이 준비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우선 자체적으로는 Y2k 문제 해결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
 - 아울러 Y2k 문제 해결에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, 풍부한 경험과 전문 툴(tool)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업체도 적극 활용해야 함
- 부품 공급업체와의 공동 대응 필요
 - Y2k 문제는 자사의 오류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나 부품 납품업체 등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
 - 따라서, 원자재나 부품, 기계 장치 등의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상호간의 기술·정보 제공 또는 지원 등의

협력업체 및 관련업체와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함

조치를 취해야 함

-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

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, 법률적 분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고객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

- 대고객 지원 방안의 모색

- 판매 제품에 Y2k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
- 국내 기업의 경우 50% 정도만이 고객들에 대한 Y2k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 지원 차원에서의 노력이 또한 요구됨
- 기업은 고객들에게 Y2k 공문을 발송하고, 기술 지원을 행하는 ‘대고객 지원 센터’ 같은 것을 운영하여 이미지 제고 및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함

2000년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함

-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

- 2000년까지 모든 오류를 완벽히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
- 따라서, 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해서 2000년 이후에 Y2k 오류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여야 함

○ 政府의 支援 方案

우리 정부는 기업들,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, 다수의 인증기관 설립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요청됨

- 정부 지원의 강화

- 설문 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
- 이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기업,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기술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- 정부는 지원책을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금 및 기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

- 조속한 인증기관의 설립
 - 앞으로 모든 거래 상대방들은 Y2k 문제 해결을 보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게 될 것임
 - 이미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인증기관을 설치해야 함

- 업종별 유관 단체의 지원
 - 시간이 촉박하므로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Y2k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임
 - 업종별 단체들이 자금, 인력,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풀(Pool)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신속한 해결책이 될 것임

(이장균 : johnlee@hri.co.kr ☎724-4072)